

企劃論文

#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민족통일노선

정 용 대\*

I. 서론	IV. 해방정국에서의 조소앙과 삼균주의
II. 삼균주의의 이론체계	V. 조소앙의 민족통일운동과 삼균주의
III. 삼균주의의 생성과 채택과정	VI. 결론

## I. 서론

한 시대의 이념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현실적 과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sup>1)</sup> 그러면 오늘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사상적 지향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념체계를 확립하는 일과 성숙한 내부적 역량을 통해 합리적인 민족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혁기에 처해 있는 현시점에서 통합이념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통일의 시대

\*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치학 전공.

1) 한승조 교수는 “보통 하나의 정치이념이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운동의 목표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하고, 현실상황의 분석이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현실상황 속에서 그 운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하고, 그 정치운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체계적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한승조, 『한국의 정치사상』 1989, 342쪽에서 재인용).

를 앞당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는데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이념으로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제시할 수 있다. 항일독립운동 시절부터 민족의 통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던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의 시대적·이론적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통합을 위한 제3의 이데올로기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당시의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민족집단을 통합하여 단일전선을 형성하고 통일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추구하였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상적으로 분열된 좌우익을 통합하여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들 민족통일노선은 1920년대 이후 통일전선운동과 좌우합작, 남북협상운동 등을 통해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정치이론들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해방 이후에는 냉전을 겪으면서 탈이데올로기를 주장하며 정치사회적 대립을 평화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왔는데 특징이 있다.

해방 이후는 한민족의 최대과제인 민주적 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정치적 노력은 모두 실패하고, 그 결과로 초래된 민족분단과 남북간의 첨예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에서 진행되어 온 보수와 진보에 대한 논쟁도 서구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전개되었다. 순수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보다는 오히려 좌우의 이념갈등만이 존재하였다. 분단의 특수한 조건에서 강조되어 온 반공논리는 진보세력들을 용공시하는 정치풍토를 조성하였고, 다양한 이념들을 좌우로 단순화시켰다.<sup>2)</sup> 이러한 관점에서 해방 이후 정부수립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정치이념들을 재조명하고, 이를 오늘의 정치이념의 기반으로 재정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념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주체로서 그 명분과 실질을 확보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근대적 민족국가와 국민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삼균주의가 어떠한 정치이론을 갖고 생성되고 발전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2) 조찬래, 「한국현대사에 있어서의 보수와 진보」, 한국정치사학회 1999년 5월 학술대회 논문집, 93쪽

다. 특히 통일노선을 주장하던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중심으로 어떤 사상적 대안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려고 하였는지, 사상적 특징과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방정국에서 조소앙의 정치활동을 조명해 봄으로써 삼균주의가 광복 후 어떠한 성격의 사회와 민족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분단된 당시의 상황에서 삼균주의의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삼균주의의 이론체계

삼균주의는 일제 식민지시기에 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을 통해 생성되고 발전된 정치이론이다. 당시 한민족이 해결하여야 할 최대과제는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여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독립운동으로 나타났고, 독립운동이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이론적으로 구체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삼균주의이다.<sup>3)</sup> 삼균주의의 이론과 내용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韓國獨立黨之近像」이란 글을 통해서이다. 이는 조소앙이 한국독립당의 조직·활동·주의·정강·정책 등을 소개하고 설명한 것인데, 한독당이 표방하는 주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4)</sup>

독립당이 표방하는 주의는 무엇인가? 개인과 개인(人與人), 민족과 민족(族與族), 국가와 국가(國與國)의 균등생활을 실현하는 것으로 주의를 삼는다. 무엇으로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도모하는가? 정치균등화, 경제균등화, 교육균등화가 바로 이것이다. 보선제(普選制)를 실행하여 정권을 가지런히 하고, 국유제를 실행하여 경제를 가지런히 하며, 국비의무학제를 실행하여 교육을 가지런히 할 것이니, 이것으로써 국내 개인과 개인의 균등생활을 실현한다. 무엇으로 민족과 민족의 균등을 이룰 것인가? 민족자결을 자타민족에게 적용하여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이 피압박·피통치의 지위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국가와 국가의 균등을 도모할 것인가?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약소국을 겸병하거나 공격하는 전쟁행위를 근절시켜 모든 국가

3) 한시준, 「조소앙의 삼균주의」, 『삼균주의연구논집』, 제17권(1993), 21 쪽

4) 조소앙, 『소앙집』(1932), 84-85 쪽

로 하여금 서로 간섭하거나 침탈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생활에서 평등한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해일가(四海一家)·세계일원(世界一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삼균주의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균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의 균등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보통선거제, 국유제, 국비의무교육제의 실시를 들고 있다. 민족과 민족의 균등은 민족자결주의를 자민족과 타민족에게 적용함으로써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이 피압박, 피통치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국가와 국가와의 균등은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를 무너뜨림으로써 모든 국가가 서로 간섭하거나 침탈하지 않는 국제생활에서의 평등한 지위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해일가, 세계일원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이론체계를 가진 삼균주의는 식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국제사회에서, 내부적으로는 한민족의 동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한민족이 인류의 공헌체로 존재할 가치를 이론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은 민족내의 계급을 극복하여 민족의 동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광복 후 민족국가건설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sup>6)</sup> 그리고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은 민족의 특수성을 국제적 보편성과 모순없이 존립시켜 인류의 공헌체로서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삼균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심은 국민생활의 균등이었고, 이를 위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즉 소앙에게 있어서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적 사회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서 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sup>7)</sup>

5) 한시준, 앞의 논문(1993), 32 쪽

6) 이러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것이 「신민주국」이다.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점을 극복한 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삼균주의가 지향한 신민주국은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독재를 거부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결점을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정용대, 「조소앙과 삼균주의의 정치적 의의」, 『삼균주의연구논집』, 제8집(1986), 18 쪽

조소앙은 무엇보다 독립 후에 건국될 국가의 위상을 한민족 전체의 소유로 규정하였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기초는 정치적 균등으로 보통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 평등과 국민의 기본권리 보장 및 지방자치와 의회 등의 민주주의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조소앙이 사상의 핵심을 평등으로 한 것은 모든 분쟁의 원인이 불평등에 있다고 보았고, 불평등이 작용하는 영역을 개인, 민족, 국가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앙은 개인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그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조소앙은 균등의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불균등→불평→분쟁’이란 등식을 세우고 균등주의의 가치를 절대화하였다. 따라서 삼균주의의 기본이념은 균등주의에 있고, 삼균주의는 <균등>이라는 원리를 적용시켜 체계화한 방법론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삼균주의가 제시하는 광복 후의 민족국가건설의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삼균주의가 정립되고 또 민족운동전선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되는 과정은 바로 민족운동 자체의 전개과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조소앙은 일제하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상실되어 가는 민족정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조소앙은 1946년 4월 21일 『서울신문』에 발표한 「삼균(三均)의 대요(大略)」에서 “민주주의에 의한 혁명적 수단으로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광복하고,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을 건설하여서 안으로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하고, 밖으로는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세계 일가의 진로로 향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는 “제1보로 국가를 광복한 다음에 제2보로 국가의 모든 대중을 동원하여 제3보에야 국가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과학적 시설로서 영원한 집단생활을 계속 성장하게 할 질서와 제도로, 현존한 일반적 독립국 민주정부 자유사회의 제도만을 건립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내용으로 본질적으로 고차적 생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경제·교육의 삼균제도를 철저한 혁명적 방식으로 건립할 것을 갈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7) 정용대, 「삼균주의와 제3의 길」, 『삼균주의연구논집』, 제19집(1999), 61쪽.

즉 조소앙은 개인관계의 균생, 민족관계의 자결, 국제관계의 완전한 평등적 주권행사는 아직까지도 인류사회의 필수과정으로 잔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투철한 태도와 결정적 정책을 단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복국단계에서는 정치·경제·교육의 3대 핵심문제를 일보씩 균권(均權)·균부(均富)·균지(均智)의 방향으로 추진하며, 계획함에 용감한 혁명적 수단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건국시기에는 정치·경제·교육의 3대 문제를 완전히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제도는 복국·건국·치국 3 단계의 공통된 필수 과정이며 중심공작이며 기초적 본질을 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소앙에게 있어서 정치문제는 항상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 되고 있다. 경제를 통하여 교육문제에 연결되고, 개인의 균생권 문제와 민족의 자결문제와 국제간의 평등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조소앙은 “경제문제는 일체(一切)의 중심이며 일체(一切)의 원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산관계 위에 건립된 경제제도 위에 전부가 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는 개인을 출발점으로 하여 균등하게 생산·분배·소비 등 권리를 부여하며, 민족을 중심점으로 하여 고도의 과학방법으로 생산을 증가하며, 국민전체의 총부력(總富力)을 증가하는 동시에 응분의 소비를 균등하게 하고, 국제적으로 자원의 호용, 기술의 합작, 자본의 수출입 등 교호관계를 전제로 하여 국제전체에 상응한 조화 및 협조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성질로 보아 개인의 완인육성 문제로 개인에 연락되고, 민족의 건전한 자격품성 및 재능을 양성할 필요로 민족에 치중할 필요가 있고, 지식은 국경이 없으니 국제적 성질이 농후하며 과학의 수입 및 수출은 일종의 국제 문화생활 중 불가분의 임무인고로 국제방면에 진정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요언(要言)하면 지(智)의 정도 제고가 지(智)의 횡적 보급과 균학주의 또는 지(智)의 내용으로 하여금 신인·신민족·신세계 창조에 적합하도록 매진케 하자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8)</sup>

삼균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내적으로는 국민개인의 정권참여 기회의 균등화, 경제적 조건의 균등화,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자결을

8) 삼균학회, 『소앙선생문집 上·下』(햇불사, 1979), 71~73쪽.

철저히 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더 나아가서 국제간의 침략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세계평화를 달성하려는 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종합 체계화한 것으로서 개인이나 특정계급에 의한 독재의 존립과 창출을 완전히 배격하고, 민족 최대 다수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사회를 건설하려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시준 교수는 “삼균주의는 일제에게 국토와 주권을 상실했던 시기에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여 민족 전체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고, 나아가 인류평화가 실현되는 최고단계로서 세계일가를 지향했던 한국 근대의 이상적인 정치사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9)</sup> 즉 삼균주의의 이론체계는 ‘사람간의 균등,’ ‘민족간의 균등’ 그리고 ‘국가간의 균등’ 등 세 차원에서 균등원리에 입각하여 평등하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민족사회 내적으로는 정치·경제·교육의 세 방면에서의 균등에 의하여 그 계급적 갈등을 조정·통합하여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정치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삼균주의의 생성과 채택과정

삼균주의가 정립되고 민족운동전선의 지도이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은 바로 민족운동 자체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10)</sup>

#### 1. 삼균주의의 생성과정

조소앙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기울였던 노력의 하나는 독립운동의 방향과 목표를 정립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단이 1917년 「대동단결선언」을 작성하여 발표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대동단결선언」은 신규식, 박은식, 조소앙 등 상해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14명이 공동명의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한 선언서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의 독립운동이 국내외 각지에서 형편과 처지에

9) 한시준, 앞의 논문(1993), 40 쪽

10) 강만길, 『조소앙』(한길사, 1982), 311~312 쪽.

따라 산만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더욱이 「대동단결선언」은 국민주권설에 기초하여 임시정부 수립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혁명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sup>11)</sup> 이후 조소앙이 독립운동의 방법과 목표에 대한 대체적인 골격을 정립하게 된 것은 「대한독립선언서」를 통해서였다. 이 선언서는 1919년 2월 길림성에서 39 명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것인데, 조소앙이 기초한 것이었다. 이 선언서가 갖고 있는 특징은 독립을 쟁취하는 방법과 독립을 달성해야 하는 논리, 그리고 복국과 건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실현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립을 달성하여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단계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족국가 건설의 방향은 정치평등(同權), 경제평등(同富), 교육평등(等賢), 사회평등(等壽)을 실현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민족평등, 국가평등을 실현하여 사해인류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타나는 기본이념은 균등이고, 정치·경제·교육·사회의 균등에 기초한 민족국가 건설과 민족평등, 국가평등을 실현하여 국제평등으로 나아간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1919년에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당시 임시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 기본질서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이어 확산되기 시작한 공산주의 이론에 일부 한인들이 영합하게 되고, 무정부주의까지 유입됨으로써 사상적 대립을 야기시키게 된다. 결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전선이 분열되고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진영의 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이 막연히 민주공화국 체제만 표방하면서 192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빈곤과 사상적 공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조소앙은 독립운동의 실천 방략으로 삼균주의란 정치이데올로기를 정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소앙은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유지시켜 왔다. 조소앙은 임시정부수립 당시 국무원비서장에 선출된 이래, 유럽에서의 외교활동기간 2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시정부의 핵심으로 활동하였다. 임시의정원 의원 및 의장, 국무위원, 내무총장 등을 역임하였는데, 주로 외무부장의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다. 조소앙은

11) 한시준, 앞의 논문(1993), 27 쪽

12) 위의 논문, 28 쪽



1919년부터 1921년까지 2년에 걸친 유럽순방을 하게 되는데, 당시 레닌의 노선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만국사회당대회에 참석하고 유럽 각국을 순방하면서, 특히 영국노동당 인사들과 접촉한 일은 그의 사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소앙은 1920년대에 임시정부와 한독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론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 「한국독립당선언」 등 각종 선언서를 기초하고 작성하면서 독립운동의 방향과 지도이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게 되었다.

## 2. 삼균주의의 채택과정

삼균주의는 1920년대 후반에 한국독립당과 임시정부의 정치이념으로 채택되고 수용되면서 민족국가 건설의 방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삼균주의가 정치적 사상 체계로 이론이 정립된 후에 처음으로 삼균주의를 정치노선으로 채택한 정치단체는 1929년 창당된 한국독립당이다. 한국독립당은 이동녕, 안창호, 김구, 조소앙 등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상해에서 결성되었는데, 당의(黨義)와 당강(黨綱)에 삼균주의의 이념과 원칙을 표방하였다.<sup>13)</sup>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임시정부의 집권정당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삼균주의는 1930년대 생겨났던 여러 정당의 정강·정책에 채택·수용되고 있다. 1930년대에는 좌우익 정당들과 독립운동단체들이 삼균주의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삼균주의는 독립운동 진영의 정치이념으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삼균주의는 1930년 한국독립당의 기본이념으로 채택된 이래 민족혁명당 한국독립당 등 1930년대 중반이후 활동하였던 좌우익의 여러 정당에서 채택되어 독립운동의 통일된 정치이념으로 정립되어 갔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족진영이 1930년경부터는 그간의 이론적 빈곤과 사상적 방향에서 벗어나 삼균주의를 새로운 정치적 지표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삼균주의를 종합하여 체계화시킨 것이 「건국강령」이다. 1941년에 광복후의 민족국가건설을 계획하면서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기본골격을 이루게 됨으로써 소위 한국독립운동의 민족국가건설론으로 귀결하게 되었다.

13) 권영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삼균주의」, 『삼균주의연구논집』 12 집(1992), 302 쪽

건국강령은 1931년 4월에 임시정부가 건국 원칙으로 발표한 삼균주의를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건국강령은 삼균주의의 구현방안이기도 했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5일 제19차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위원 전원의 연명으로 공포되었다.<sup>14)</sup> 이와 같이 건국강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는 점에서 1931년 공포되었던 「임시정부 대외선언」과 그 위상이 다른 것이다. 이 강령은 삼균제도에 의한 건국원칙을 천명하고 삼균주의의 사상적 연원, 이념, 원칙, 제도 및 정책 그리고 구현방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망라되었다.

강령의 총강에 의하면 삼균주의의 사상적 연원은 단군의 홍익인간의 개국정신을 비롯하여 전통시대의 정신사에 있다는 주장이고, 그것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해서 혁명적으로 발전하여 1931년 삼균주의로 구체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총강 제2항에서는 홍익인간의 건국정신이나 “首尾가 고루 평위해야 나라가 흥하고 태평을 보존한다”는 고언을 ‘先民의 明命’ 또는 ‘최고공리’라며 그 연원을 근대적 혁명이념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정신에서 찾고 있다. 다만 그러한 전통정신을 삼균(三均)으로 새롭게 구체화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삼균주의는 혁명이념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sup>15)</sup> 그럼에도 삼균주의가 전통시대에서 정신적 연원을 찾고 있었던 것은 삼균주의의 사상적 연원이 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삼균주의는 3.1운동으로 집약된 민족주의, 자유주의로 출발하여 1930년대에 삼균주의로 정립되었으며, 1941년 대한민국건국강령으로 발전하여 지도이념으로 확립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도이념의 통일과 독립운동 방략의 정립이 좌우익 세력들을 임시정부로 합류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4)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문서』(1974), 21~22 쪽

15) 조동걸, 「조소앙의 생애와 민족운동: 삼균주의와 삼균주의 사상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사의 제조명 2』(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998), 139~151 쪽

## IV. 해방정국에서의 조소앙과 삼균주의

### 1. 미군정과 좌우익의 건국운동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항복은 일제의 식민통치기간 동안 이에 협조하거나 또는 저항하면서 단면적인 모습으로 존재했던 국내외의 정치세력들을 지상으로 분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임시정부는 해방 후인 1945년 9월 3일 국무회의 명의로 「당면정책 14개조」를 발표했다. 1941년에 발표한 건국강령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당면정책 14개조」를 통해 임시정부는 환국이후 국내 질서유지와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일과 국내외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과도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임시정부의 역사적 사명임을 천명했다. 물론 과도정권은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내세우는 정식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단계로 설정된 것이었다. 이 구상은 미군이 38도선 이남에 진주하기 이전부터 구상된 것이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구상했던 역할을 실제로 담당하게 된 것은 38도선 이남에 주둔하게 된 미군정 당국이었다.

미군정은 10월 16일 하지의 성명을 통해 미군정청이 “일본의 통치로부터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민주주의 정부를 건설하기까지의 과도기간에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통치, 지도, 지배하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도하에 미국군으로서 설립된 임시정부”이며, “남부조선에 있어서 유일한 정부”임을 천명하였다.<sup>16)</sup> 이것은 바로 임시정부가 환국 이후 자임하고자 했던 역할이기도 했다. 임시정부는 이미 해방 이전부터 임시정부 승인을 위한 외교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임시정부 승인은 임시정부가 국제적·법률적으로 정부라는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문제였다. 또한 국내 정치세력들에게는 임시정부 봉대론을 선전하거나 또는 임시정부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sup>17)</sup>

해방 직후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킨 좌익진영은 반공우익 인사들의 결집체로 알려진 임시정부에 대해 처음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자세를 취

16) 『서울신문』, 1945년 10월 16일자

17) 김정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과 정치세력의 대응」,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논집』(국가보훈처, 1999), 601 쪽

했다. 그들은 임시정부가 해외에서 지리멸렬하게 활동하여 국내에 토대가 없고, 연합국으로부터 승인받지도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임시정부 봉대론을 거부하였다. 비록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참여를 거부하기는 하였지만, 좌파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민공화국은 여전히 스스로를 국가로 칭하면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고 지방에까지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한편 우익진영은 해방 직후 좌익진영이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자, 임정 절대지지는 임정봉대론으로 맞섰다. 송진우는 1945년 9월 인공반대와 임시정부 절대지지의 내용을 담은 서신을 김구에게 보내기도 했다.<sup>18)</sup> 중간우파적 성격의 안재홍을 대표로 하는 국민당도 결성 초기부터 임정봉대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당의 임정봉대론은 우익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중국에는 좌익이 주도하는 정계구도를 역전시키겠다는 의도보다는 임정이 우익진영의 대립하는 경향과 영웅주의적 할거라는 구태를 청산하고 민족통일전선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군정에게는 자신들의 행동에 ‘민족주의적 정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친일하지 않은 민족주의적 우익인사를 찾아내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군정 3년의 정책적 핵심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우익인사를 발굴하여 그들이 재건해 놓은 관료조직을 맡기는 것”<sup>19)</sup>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군정은 한국에 진주하자마자 인공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고, 여기에서 친일경험이 없는 민족주의적 이미지를 지닌 집단으로서 임시정부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승만과 김구를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커밍스는 맥클로이의 메모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아시아 개입정책을 특징짓는 몇 가지 가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한국민이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로 미국이 선택하는 지도자는 합리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셋째로 일단 반공적 리더십이 갖춰지면 그것을 공고하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런 후에야 ‘자유롭고 제한없는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20)</sup> 이러한 방안은 1945년 11월 20일 한국에 파견되어 있

18) 위의 논문, 607쪽.

19) Bruce Commings,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erate Regime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1, p. 179.

던 랭던(Langdon)이 국무성에 보낸 전문 속에도 잘 나타나 있다.<sup>21)</sup>

1. 점령사령관은 김구를 중심으로 군정내에 각 정치세력의 대표들을 소집하여 장래의 정부형태를 연구할 협의회를 구성케 하고, 나아가 정부위원회 (Governing Commission) 을 조직케 한다
2. 이 정부위원회를 군정에 통합한다.
3. 정부위원회는 군정의 뒤를 이어 임시정부로서 발족시킨다. 단 점령사령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미국인 감독관과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4. 소련, 영국, 중국에도 감독관과 고문을 파견하도록 요청한다.

미군정은 두 차례에 걸쳐서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이 완료된 12월 4일 “임시 정부는 조선에서 정부로서 승인되지 않았고 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행정권은 곧 양도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천명하였다.<sup>22)</sup> 즉 미군정은 처음부터 임시정부를 통치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미군정의 정책수행 협조자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 2. 해방정국에서 조소앙의 역할

일제가 패망한 후 조소앙은 1945년 12월 1일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귀국하였다. 1913년 상해로 망명한 지 32년 만이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미군정의 요구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환국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환국 후에도 임시정부와 한독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환국할 당시에 임시정부 외교부장, 한국독립당 부위원장이었던 조소앙은 임시정부와 한독당을 유지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20) Bruce Commings, “American Policy and Korean Liberation,” Frank Baldwin(ed.), *Without Pararell*, New York: Pantheon Books, 1974, pp. 50-59.

21) U.S. Department of State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6. 1945. pp. 1129~1133.

22) 『서울신문』, 1945년 12월 5일자

임시정부가 해방정국의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게 된 것은 신탁통치문제를 계기로 해서였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안이 국내에 알려지자, 임시정부에서는 즉각 반탁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조소앙은 국무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통치 반대를 표명하는 「4국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김구 주석과 공동 명의로 미·영·중·소 4개국에 발송하였다. 이와 함께 임정은 「탁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고, 반탁운동을 주도해 갔다. 조소앙은 부위원장으로 반탁운동을 주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좌익측과 협조를 추진하였다.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진영이 모스크바 결정안 지지를 표명하자, 조소앙은 장건상 등과 함께 임정측의 대표로 이들과 4당 회합 및 5당 회합을 가지면서 신탁통치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지 못하고, 1946년 2월에 좌우익진영은 각각 「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여 각기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다.

이 시기에 진보세력으로는 건국준비위원회(여운형), 조선공산당(박헌영), 민족자주연맹(김규식) 등을 들 수 있다. 여러 형태의 진보세력들과 이념들이 출현함에 따라서 그들은 조직과 이념적 차원에서 분화현상을 겪게 되었다. 공산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내에서도 여러 파벌들이 독자세력으로서 형성되었으며, 진보세력의 이러한 다양성은 자연스럽게 이념적 분화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좌우대립이 격화되자 진보세력들의 활동은 매우 위축되었다. 진보세력들 중 일부는 혁명론을 숭상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자신들을 구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구분의 결과로서 중도적 보수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은 정치적 활동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23)</sup>

한편 임시정부에서는 과도정부 수립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과도정부에서 국민대회를 소집하여 정식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 임시정부의 노선이었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는 1946년 1월 17일 비상정치회의의 소집을 발표하였고, 그 결실로 2월 1일 「비상국민회의」가 결성되었다. 비상국민회의는 임시의정원의 직권을 계승한 것으로서 과도적 최고 입법기관으로 결성된 것이었다. 조소앙은 비상국민회의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이에 깊이 관여하였고, 1947년 2월에는 명칭이 「국민회의」로 변경

23) 조찬래, 앞의 논문(1999), 100 쪽

되면서 의장을 맡기도 하였다.

## V. 조소앙의 민족통일운동과 삼균주의

조소앙은 단독정부 수립과 남북분단이 가시화되면서 민족통일운동에 앞장서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도 두 차례 모두 결렬되었고, 1947년 9월에는 결국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고 말았다. 조소앙은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간 후 각 정당협의회 결성과 남북지도자회의 소집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한독당에서는 10월에 “남북지도자회의를 소집하여 38 선을 철폐하고 남북통일선거에 의해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조소앙은 이를 위해 우선 남한의 좌우정당들의 협의회를 결성하고, 나아가 남북 정당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기구에서 미·소 양군의 즉시 철병과 한민족에게 정권이양을 요구함으로써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1947년 11월에 이르러 조소앙은 한독당, 근로인민당, 사회민주당 등 13개 정당이 참여한 각 정당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우파정당이 정당협의회에 대해 강력히 공격해 왔고, 조소앙은 정치권에 실망한 채로 12월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sup>24)</sup> 이로써 정당협의회도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1948년 2월 유엔의 결정에 의해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가 발표되자, 조소앙은 단정수립을 반대하면서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다. 3월 11일 김구, 김규식, 김창숙 등 7명과 공동으로 단독선거 불참과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민족분단은 미소전쟁의 전초전을 초래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고, 민족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4월 20일 한독당 대표로 남북협상안 7조 항목을 발표하고 김구, 김규식 등과 함께 평양의 남북협상에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24) 조소앙은 1947년 12월 28일 발표한 「정계은퇴 성명서」에서 남북회의의 진행에도 남한정당회담에도 國議·民代와의 단결에도 실패한데 상심하여, 각 사회단체와 기관 신문 및 정당의 간부의 명예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김구, 홍명희 등과 주석단에 보선되었고, 축하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5월 6일 서울로 돌아온 조소앙은 1948년 12월 한독당을 탈당하고, 새로이 사회당을 창당하여 정치활동을 재개하였다

이러한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 조소앙은 해방된 조국에 그의 정치사상인 삼균주의를 정착시키려 노력하였다. 1946년 12월에는 「삼균주의청년동맹」을, 1947년 3월에는 「삼균주의학생동맹」을 각각 결성하여 삼균주의를 보급 정착시켜 나갔다. 1948년 3월 7일 발표한 「삼균주의학생동맹 선언」에서는 “전인민은 교육상의 지력(智力)과 정치상의 권력(權力)과 경제상의 부력(富力)의 균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투쟁을 개시하고 있다. 즉 삼균주의 사회로 지향 발전하고 있다. 삼균주의는 이러한 역사적 발전에 의하여 우리 한국에서 탄생한 것이다”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sup>25)</sup>

1. 삼균주의학생동맹은 종래 사회의 소수 유식계급만이 향유하였던 지력을 전 인민으로 하여금 균등케 한다. 즉 국비의무적 균등교육제를 실시함으로써 무식을 혁명하고 전인민으로 하여금 지력의 균등사회를 건설한다.
2. 삼균주의학생동맹은 종래 사회의 소수 유력계급만이 전제하였던 권력을 전 인민으로 하여금 균유케 한다. 즉 노동계급과 학술층이 배합된 국가체제를 실시함으로써 무력을 혁명하고 전인민으로 하여금 권력의 균등사회를 건설한다.
3. 삼균주의학생동맹은 종래 사회의 소수 유산계급만이 독점하였던 부력을 전 인민으로 하여금 균유케 한다. 즉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제를 실시함으로써 무산을 혁명하고 전인민으로 하여금 부력의 균등사회를 건설한다.

그리고 조소앙은 남북협상의 실패 후 단정의 참여를 결정하면서, 1948년 10월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삼균주의를 실천하자면 입법기관에 발언권을 사용하는 단계를 통하여서만 가능할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의 방법으로 “전민중의 공론을 채용할 것과 권력형태의 조직을 통할 것과 국제기구의 협조를 고려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매진하자면 삼

---

25) 삼균학회, 앞의 책, 101~103쪽.



균주의의 사상을 향촌에 있는 농민층에, 도시와 향만에 있는 노동계와 각 상점에 있는 소시민과 사용인층에, 중학이상의 학생층에, 관공리 각층 급에까지 인식시켜 민족적 견해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제도의 궤도로 들어서게 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르기 때문에 이런 과업을 기성정당으로써 활발하게 집행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면 신조직의 형태를 통하여 이것을 운용하는 전환적 기축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서 민족진영의 재단결과 균등사회의 법률화하는 현실적 행동론과 신조직 轉變論을 4원칙으로 각 방면이 합의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1948년 12월 1일 사회당 결당대회 선언을 하였다.

조소앙은 창당선언서에서 “우리 사회당은 당쟁과 정권쟁탈 등의 용속(庸俗)한 폐해를 배제하고 모든 농민과 노동자와 사무원 및 소시민 및 학술훈의 정예분자를 규합 결속하여 모든 국민에게 균등사회의 이념을 고취하며, 나아가 반민족 반민주주의 분자 등 일체 반동분자들을 제외한 각계각층, 각당 각파, 무당무파 등 일체 민족진영과 보조를 같이 하여 현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남북통일을 완성하고 정치, 경제, 교육상 완전 평등한 균등사회 건설에 일로매진할 것을 전 민족 앞에 정중히 선언한다”고 발표하였다.<sup>26)</sup>

한편 조소앙은 1950년 4월 1일자 『삼천리』에 발표한 「차기 총선거와 余의 정국관」에서 “통일의 방법은 전민중의 공론을 채용할 것과 권력형태 조직을 통할 것과 국제기구의 협조를 고려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이 과업을 기성정당으로서 활발하게 집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민족진영의 단결과 균등사회의 법률화하는 현실적 행동론과 신조직기구론 등의 4원칙을 세우고 신당조직을 기도하였다고 사회당 창당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당은 “민족 진영의 재편성과 현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자주 및 통일을 완성할 것과 균지·균권·균부의 균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 노·농·학·상 각계각층의 총단결체이다”라고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sup>27)</sup>

조소앙은 정치에 대한 견해에서는 첫째로 자주독립과 남북통일의 완성, 민주정치발전을 당면과제로 꼽고 있다. 그리고 “민주정치의 중심은 의회이다 정부도 의회의 기초에 서야 할 것이며, 책임도 의회 즉 국민에게 지는 책임정치가 되어야

26) 위의 책, 115~116쪽.

27) 위의 책, 133 쪽

한다”고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주정치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고루 보급시켜 국민의 자치능력을 향상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자치체의 조속한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 난관에 착안하면서 국제법과 외교관례를 참조하여 형식적 독립에 안주하는 것보다 내용으로 독립국가의 모든 주권이 약동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8)</sup>

1948년 말경 발표된 글로 보이는 「나의 주장」에서는 정치 분야에서 민주적 민족역량의 육성 강화와 국제협조로써 국토통일과 자유공정의 선거를 통한 진정한 민의반영의 대의정치, 인권의 옹호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확보 행정기구의 간소화와 공무원의 생활보장, 지방자치체의 조속한 실시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족자본을 축적하여 자주경제를 확립하고 종합적 계획경제로 민생안정을 기할 것과 주요산업은 국·공영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지도 육성할 것, 국가예산의 수지균형 도모, 토지개혁의 단행, 양곡정책의 ‘수집 과’ 배급’제도의 실시, 노동법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제, 단체계약권, 사회보장법을 확립하고, 보건·교육 등 복지시설을 확충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민교육의 의무화와 국비제도의 실시, 장학제도의 확립, 교육비 예산의 확대, 성인 교육기관의 확충, 대학의 자유와 권위 확보, 과학과 기술의 연구기관 확충 등을 주장하고 있다.<sup>29)</sup>

조소앙은 1950년 5.30 선거에 출마하여 전국 최다득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삼균주의를 정책적으로 실현해 볼 기회를 가졌다. 조소앙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밝힌 정견<sup>30)</sup>에는 “국가의 독립은 정치적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기초로 경제적 기반이 확고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자주경제 확립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중요산업에 있어서 통제 내지 계획경제 실시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경제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제1 단계로 자급자족, 경제 확립을, 제2 단계로 농업입국을 광공입국으로 전향케 하는 동시에, 균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일체의 경제자원을

28) 위의 책, 135 쪽

29) 위의 책, 126~131 쪽.

30) 1950년 3월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할 것을 결정하고 발표한 「나의 出馬理由와 그리고 政見」 참조(삼균학회, 위의 책, 126~131 쪽).

총동원하여 계획경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조소앙은 당시 우리나라와 같이 전후의 제반조건이 제약된 단계에서는 종합적 통제경제 내지 계획경제로 생산과 소비를 좀 더 규제하여 국가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 당면 민생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 외에도 농지개혁의 급속한 실시와 농업의 다각적 운영에 필요한 농림용지의 재편성, 농민본위의 협동조합을 기간으로 농촌을 공동체로 재조직하여 농촌경제의 공동운영과 농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등에 대해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소앙은 해방이후 삼균주의 실현의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9월에 납북되고 말았다. 조소앙은 납북된 후에도 민족의 통일과 삼균주의의 실현을 갈망하고, 이를 위해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조소앙은 북한측의 노동당 가입과 협력요구를 거부하고, 안재홍과 함께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참가하여 민족통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하며, 그 실현을 유언으로 당부했다고 한다.<sup>31)</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정국에서의 삼균주의는 독립운동시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에 접하게 되었다. 삼균주의는 성립동기가 단일민족전선에 의한 대일전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의 패망과 함께 민족전쟁의 명분이 소멸되고 오히려 해방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국의 분단정책과 맞서게 되어 미·소 양군은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삼균주의의 이념을 추구하는 임시정부 측을 이용하거나 견제하였다. 한편 임시정부 진영은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의 명분으로 사상적인 분열 속에서도 단결과 협조가 유지될 수 있었으나 해방 후 귀국과 함께 좌우로 분열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비상국민회의, 민주의원, 입법의원 등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은 ‘3.1운동→임정→대한민국’이란 정통성이 확립되어 임시정부의 헌장, 건국강령 등이 계승됨에 따라 삼균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에 원칙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sup>32)</sup> 조소앙은 귀국 후의 새로운 상황에 접하여 삼균주의를 새 시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고, 삼균주의를 좌우합작, 남북협상의 기본노선으로 채택시켰으나, 그것이 실패하자 1948년 10월에는 한독당에서 이탈하여 사회당을 창당함으로써 보다 선명한 진보정당의 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

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독립운동사료집: 조소앙편 I』(1995), 16~17쪽.

32) 정용대, 앞의 논문(1986), 18 쪽

에서 삼균주의는 광복독립을 위한 민족주의 중심에서 균등주의와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주체적 평등주의 노선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3)</sup>

## VI. 결론

한국사회는 지금 21세기를 앞두고 이중적 전환점에 놓여 있다. 정치적 민주화는 지연되고, 경제적 자본주의는 내재적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전통문화는 현대문화와 결합하여 기형적인 시민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발전의 과제는 우리의 정치와 사회체제를 미래의 한국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제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제나 이념, 정치제도, 사회관행들을 재조명하고, 21세기를 향한 일대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성숙된 민주사회로의 이행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수용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이념극복의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21세기 한국의 정치이념은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지만, 이것이 구현될 수 있는 체제이념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가 결합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국민의 제 권리가 보장되는 법치주의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 정치집단에 의해 사회발전을 경쟁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다원주의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사회적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형평성 있는 분배제도를 통해 조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사상적으로 민족사에서 그 연원을 찾고, 동서양의 정치사상을 연결시킴으로써 하나의 완전한 합리적 평등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성주의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 제3의 이데올로기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한국정치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평등’이라는 정치규범을 고려할 때 개인 민족

---

33) 홍선희, 『조소앙사상』(태극출판사, 1975), 112쪽.

국가 간의 평등을 추구하여 <세계일가>의 국제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삼균주의는 우리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다.

홍선희 교수의 지적처럼, “삼균주의는 세계 사상사적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은 제국주의시대에 출현한 약소민족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홍교수는 “동서양의 평등주의적 정치사상중 이만큼 완벽하고 철저한 평등주의 이데올로기는 보기 힘들다. 라코프 교수의 분류를 보아도 그들 중 어느 것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철저한 평등론과 평등주의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삼균주의는 확실히 처음부터 민족적 불평등에 의한 민족소외론에서 출발하여 평등주의 혁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삼균주의는 그 이전의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나 문화이론을 평등주의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4)</sup>

삼균주의는 참으로 근대 이후에 등장한 한국정치사상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이념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조소앙 자신에 의해 삼균주의가 충분히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이념으로서의 이론체계와 몇 가지의 부수적인 이론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미해결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내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에 있어서 상호간의 대립·모순이 나타났을 때의 해결방안, 세계일가에 이르는 과정의 구체적인 해명의 결여, 건국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에 관한 이론의 미완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삼균주의가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민족국가 건설론으로 채택되었던 가장 귀중한 정치사상의 하나인 이상, 남북교류와 통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sup>35)</sup>

한국적인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을 조화시키면서 보혁논리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토대를 안고 출발한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과거의 통합이념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의 이데올로기로서 남북분단의 민족적 갈등을 지양하고 21세기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민족통일노선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34) 홍선희,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이념」, 『삼균주의노선』(삼성출판사, 1990), 23쪽.

35) 홍선희, 위의 논문, 24~25쪽.

## 참고문헌

- 『서울신문』.
- 강만길, 『조소앙』. 서울: 한길사, 1982.
-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승인외교문서: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XI) 미주편②』 서울: 국가보훈처, 1994.
-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VIII) 대만편①』 서울: 국가보훈처, 1996.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 권』. 서울: 탐구당, 1971.
-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문서』 서울: 국회도서관, 1974.
- 권영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삼균주의」. 『삼균주의연구논집』 12집, 1992.
- 김정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과 정치세력의 대응」.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논집』, 서울: 국가보훈처, 1999.
- 삼균학회, 『소양선생문집上·下』. 서울: 햇볕사, 1979.
- 정용대, 「조소앙과 삼균주의의 정치적 의의」. 『삼균주의연구논집』 제8집, 1986.
- \_\_\_\_\_, 「삼균주의와 제3의 길」. 『삼균주의연구논집』 제9집, 1999.
- 조동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논집』, 서울: 국가보훈처, 1999.
- 조동걸, 「조소앙의 생애와 민족운동: 삼균주의와 삼균주의 사상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의 재조명2』,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998.
- 조소앙, 『소양집』. 1932.
- 조찬래, 「한국현대사에 있어서의 보수와 진보」. 한국정시사학회 편 『1999년 5월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치사학회, 199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독립운동사료집: 조소앙편(1)』,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한승조, 『한국의 정치사상』. 서울: 일념, 1989.
- 한시준, 「조소앙의 삼균주의」. 『삼균주의연구논집』 제13집, 1993.
- 홍선희,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이념」. 삼균학회 편, 『삼균주의노선』, 서울: 삼성출판사, 1990.
- \_\_\_\_\_, 『조소앙사상』. 서울: 태극출판사, 1975.
- Comings, Bruc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erate Regime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1.

\_\_\_\_\_, “American Policy and Korean Liberation.” Frank Baldwin(ed.), *Without Pararell*, New York: Pantheon Books, 1974.

U.S. Department of State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6. 1945.

● 투고일 : 2004. 11. 1

● 심사완료일 : 2004. 11. 24.

● 주제어(keyword) : 삼균주의(Samgyunism), 조소앙(Cho Soang), 균등(equality), 민족통일(national unification), 민족국가(nation-state)